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운항 나선다

무안공항 안전·안심 담보때까지
광주시, 국토부에 공식 건의키로
서남권 관문 공항 로드맵도 주문

광주시가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운항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또 그동안 전남도와 함께 추진해온 무안공항 민간·군 통합공항 이전사업과 서남권 관문 공항 조성 사업에 대해선 아직까지 입장 변화는 없지만, 시민의 안전이 우선인 만큼 정부의 무안공항 안전 확보 대책 등을 지켜본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8일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운항을 국토부(정부)와 12·29 여객기 참사 특위 등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큰 타격을 입은 지역 관광업계 위기 회복과 광주시민의 항공 접근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강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참사로 무안공항이 장기 폐쇄되면서 지역민의 글로벌 접근성이 차단되고, 관광업계는 여행 취소 2만여 명, 매출손실 300억원의 타격을 겪고 있다"며 "많은 지역민과 지역 관광업계에서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운항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 특위도 (광주공항 국제선 운항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국내 항공 역사상 최악의 참사를 무안공항에서 겪었고, 계엄과 더불어 여객기 참사로 인해 민간 통합공항 이전과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 사업마저도 표류하고 있다"며 "정부는 조속히 무안공항의 물리적 안전과 광주시민의 심리적 안심을 담보하는 무안국제공항 재개항 계획과 함께 시·도민이 요구하는 단계적인 서남권 관문공항 로드맵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시장은 "이번 참사에서 드러났듯 무안공항은 지리적으로만 무안에 있을 뿐 광주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항"이라며 "앞으로 광주시도 공항

안전과 관련해서 더욱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또 광주 민간 공항 동시 이전 사업의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까지 무안공항을 서남권 관문으로 만들자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이제는 지난 6일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전남 공동 발전을 위해 광주 민간 공항 동시 이전 문제를 하루빨리 매듭짓자'고 언급한 것처럼 전남도와 무안군이 이전과는 다른 각오와 모습으로 임해주리라 믿는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강기정 시장의 이날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운항 발표, 개항 시점과 개항 가능성 등에 대한 시·도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단 광주공항이 2008년까지 국제선을 운항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무안공항에서 운항해온 일본·중국·대만·베트남 등 근거리 국제선 노선의 임시 취항 능력은 충분하다는 게 광주시와 공항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제선 개항 준비 기간도 일반적으로 세관·출입국·검역·국제선 관제관인 시설, 국내선과의 공간정비, 동선 분리 등에 6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이미 국제공항 운영 경험이 있는 광주공항의 경우에는 2개월 안팎이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계획 등이 최소 3개월 이전부터 확정된다면 점 등을 고려하면, 국제선 항공 수요가 집중되는 올 10월 이후인 동계시즌부터는 운항할 수 있을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무안공항 참사 원인으로 지목되는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가 광주공항에도 설치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토부에서 올 상반기 내로 전국 공항의 로컬라이저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로 했다"면서 "광주공항의 로컬라이저는 높이가 0.7m에 불과해 제거작업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남도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선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광주공항 국제선 취항은 비현실적"이라며 "올 8월 무안공항 재개항을 목표로 광주시는 상생 협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근대화의 상징' 전방·일신방직 이젠 광주 쇼핑·문화 공간으로

도시계획 절차를 마치고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개발이 예정된 광주 북구 임동 전방·일신방직 부지의 철거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18일 오후 부지 내 남겨진 골목과 일부 건물이 자리하고 있다. 1935년 설립된 전방·일신방직 공장 부지는 광주의 산업화와 근현대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으로, 일부 시설은 역사박물관 형태로 보존될 예정이다. 부지면적 3만2,364㎡에 지하 6층~지상 8층, 높이 60m 규모로 조성되는 복합쇼핑몰에는 쇼핑·문화·여가 시설이 포함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헌재, 20일 예정대로 10차 변론...尹측 변경 요청 거부

헌법재판소(헌재)가 20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같은 날 내란우무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됐으며 일정을 변경해 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18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20일 10차 변론기일에 대한 진행일정을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평의 결과를 전달하겠다"며 "(대통령 형사재판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심판(기일)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에 대해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은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해 2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연거불러 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다음 기일을 거부하는 건 아니다"라며 "(형사재판에) 물리적으

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헌재) 재판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서 가능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휴정 시간을 이용해 논의를 거쳐 10차 변론을 예정보다 1시간 늦춘 오후 3시에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차 변론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후 3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오후 5시,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후 7시로 출석 시간이 조정됐다. 증인신문 시간도 기존 1인당 90분에서 120분으로 늘어났다.

헌재는 증인으로 채택된 조 청장을 강제구인하

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 촉탁(요청)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청장은 현재 보석이 인용돼 석방된 상태지만, 건강상 이유로 두차례 불출석했다.

조 청장은 국회봉쇄 지시의 핵심 관여자다. 윤 대통령의 지시로 경찰이 국회의원 출입을 막고 국회 봉쇄시도를 했는지 여부가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문 대행은 "조 청장은 아직 나오지 안 나올지 알 수 없다"며 "오늘 병원에 가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받고 올지, 안 올지를 말 하겠다는 상태"라고 전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공의 집단 사직 1년 - 의료현장 한계상황 ▶6면

KIA 위즈덤 "올해 홀린 45개 치겠다" ▶18면

일하는 청년 빛나는 미래 - 해양에너지 ▶22면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미래 100년을 이끌 SOC사업 국가계획 수립의 해



우리가 해내겠습니다!

도로, 철도 등 핵심사업 국가계획 반영 추진 33건, 52.1조

호남경전선 연결선, 서해안철도, 광주~화순 광역철도 등

36.4
조원

8건

영암~광주고속, 고흥~광주, 여수~순천 등

12.4
조원

5건

완도~고흥 연도교, 순천 해룡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3.3
조원

20건